

인도 총선 결과와 향후 경제정책 방향

최윤정 아시아태평양실 인도남아시아팀 전문연구원 (yjchoi@kiep.go.kr, Tel: 3460-1039)

차 례 ● ● ●

1. 총선 결과 및 의의
2. 향후 경제정책 방향 및 전망
3. 시사점

주요 내용 ● ● ●

- ▶ 2014년 5월 16~17일 발표된 인도 총선(4월 7일~5월 12일 실시) 결과 BJP가 현 집권당인 INC를 압도적 표차로 따돌리고 10년 만의 정권 교체 및 30년 만의 단독정부 구성을 앞두고 있음.
- BJP가 과반의석을 확보(전체 543석 중 282석)하여 1947년 독립 이후 INC를 제외한 정당으로는 처음으로 단독 정부를 구성하게 됨으로써 향후 안정적인 국정 운영과 모디노믹스(Modinomics)에 대한 기대로 주가와 루피화 가치가 치솟고 있음.
- ▶ 이번 총선을 BJP의 승리로 이끈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의 모디노믹스는 인프라 확충과 매력적인 투자환경 조성으로 민간의 투자를 최대한 유인하여 경제성장과 함께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업발전의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관련 규제를 타파하여 정책의 실행력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음.
- 실제로 이를 통해 모디 주총리 집권기 구자라트는 평균 9.8%의 높은 경제성장을 구현하면서도 재정적자율은 GDP 대비 5.2%(2002년)에서 2.6%(2012년)로 축소하였음.
- ▶ 주정부 권한이 막강한 인도에서 모디노믹스를 전국 차원으로 확대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며, 현재 인도가 처한 거시경제 여건(고물가, 재정 및 경상수지 적자, 엘니노로 인한 작황 부진 등)을 고려할 때 인도 경제가 단기에 고성장세를 회복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 ▶ 기업환경 개선으로 기회와 함께 경쟁 또한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 정부와 기업은 이번 총선에서 확인된 인도 사회의 변화상과 신정부 경제정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대 인도 경제협력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일본(투자 4위), 중국(교역 1위) 등에 비해 인도와의 경제협력 관계 증진이 필요한 우리나라는 인프라와 제조업 육성 부문에 대한 선제적 투자와 청년층의 전면 부상으로 예고된 인도의 변화를 고려한 미래지향적 진출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임.
- 특히 투명하고 친환경적 경영,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수행에 초점을 맞춰 전략적 차별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1. 총선 결과 및 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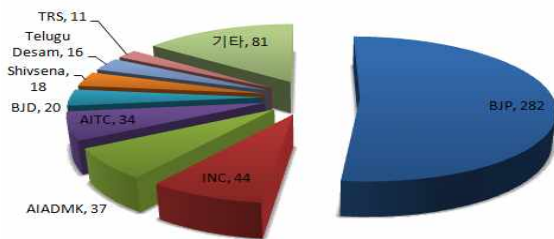
■ (총선 결과) 2014년 4월 7일~5월 12일에 걸쳐 실시되고 5월 16~17일 개표를 거친 인도 총선 결과, BJP가 현 집권당인 INC를 압도적 표차로 따돌리고 10년 만의 정권 교체를 이루고 30년 만에 단독정부를 구성할 수 있게 되었음.

- BJP는 총 543개 의석 중 282석을 확보하여 44석에 그친 INC에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1947년 독립 이후 INC를 제외한 정당으로는 처음으로 단독정부를 구성하게 됨.¹⁾

○ BJP는 Bharatiya Janata Party(인도국민당), INC는 Indian National Congress(국민회의당)

그림 1. 주요 정당별 의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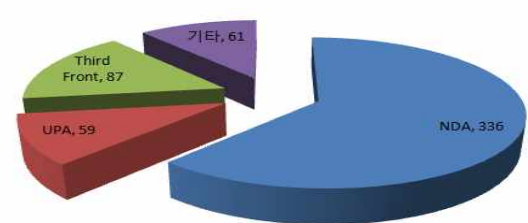
(단위: 의석 수)



자료: Election Commission of India(<http://eci.nic.in>, 2014. 5. 17).

그림 2. 연합정당별 의석

(단위: 의석 수)



주: NDA(National Democratic Alliance)는 1998년 BJP 중심으로 결성된 연합정당이고, UPA(United Progressive Alliance)는 INC를 중심으로 2004년 결성된 연합정당임.

자료: India Election Portal(<http://www.elections.in>, 2014. 5. 18)

■ (의의) BJP가 단독으로 과반의석을 확보하여 90년대 이후 가장 강력한 단독정부 구성이 가능해짐에 따라 향후 안정적인 국정 운영과 과감한 경제개혁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음.

그림 3. 인도의 주식시장(SENSEX) 추이

(1979. 4. 1=100)



자료: CEIC.

그림 4. 인도 루피/달러화 환율 추이

(단위: 루피)



자료: CEIC.

1) 인도는 1947년 독립 이후 초대 총리인 네루 가문의 INC가 정권을 독점하다시피 해왔음. BJP는 1977년 Janata Party(국민당)에서 1980년 BJP(인도국민당)라는 당명으로 분당한 후, 1991년 이후 INC와 인도 정치의 양대 정당을 이루며 군소정당들과 합종연횡하면서 연립정부를 구성해왔음.

- 정치적 불확실성 제거와 신정부에 대한 기대감으로 총선 결과가 발표된 5월 16일 주가지수는 2만 4121로 사상최고치를 갱신하였으며, 루피화 가치도 달러당 58.8루피로 11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하였음.

2. 향후 경제정책 방향 및 전망

가. 경제개발정책 및 전망: 모디노믹스²⁾를 중심으로

- 이번 BJP의 승리는 모디의 승리로 요약될 만큼 모디의 영향력이 컸음. 모디를 연방정부 총리로 내세운 신정부가 조만간 구성될 전망임에 따라, 여기서는 모디가 주총리로 재임한 2001년 이후 구자라트의 경제정책과 성과, 총선 공약을 중심으로 모디노믹스(Modinomics)로 불리는 신정부 경제개발정책의 방향을 분석함.

1) 구자라트 모디노믹스

- 모디가 중점적으로 추진한 개발정책은 인프라 확충과 산업단지 건설이었으며,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구자라트를 인도 내의 중국으로 만들었음.
- 모디는 구자라트 산업정책의 핵심 목표를 글로벌 투자매력도 확대를 통한 산업발전과 일자리 창출로 수립하고, 세부 목표로 산업 인프라 개선, 기술 및 인적 역량 강화, 비즈니스 혁신을 통한 구자라트 제품의 글로벌 브랜드화를 추진하였음.

표 1. 구자라트 산업정책(Gujarat Industrial Policy)의 주요 내용

목표	전략
균형 발전	낙후지역 산업 개발 및 인프라 구축
경쟁력 제고 및 자원 활용	산업 클러스터 조성, 섬유 및 의복, 보석 및 준보석류, 농업, 수산업, IT 및 IT 응용산업, 항만 및 연관 산업, 대체 에너지 개발
행정 효율성 제고	투자 촉진을 위한 투자자지원 시스템, 산업단지, 토지은행(Land Banks), 투자모니터링 시스템, 특별투자지구(Special Investment Region) 설치 등으로 효율성 제고
산업 인프라 개선	PPP(Public-Private Partnership)를 통한 신산업단지 개발 활성화, 효율적인 물류 서비스 제공, 내륙의 연결성 개선 등
기술 및 인적 역량강화	숙련인력 개발, 교육센터 확장, 청년창업지원센터 등
노동시장 효율성 제고	문제 사업장 재건, 비공식부문(unorganized sectors)의 주류화 지원 등
신기술 도입과 비즈니스 혁신	R&D,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기술향상지원, 인력개발 및 시장개발 지원 등)
환경 인프라 개선	환경 관련 규범과 기준 준수 독려, 담수 및 재활용수 시설, 유해폐기물 처리사업 부문 정부 주도 PPP 추진
통합발전 촉진	주정부 차원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적극 독려
국내 및 글로벌 환경 변화 대응	변화하는 세계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산관학 자문단 및 범부처위원회 결성 및 활용

자료: Gujarat Industrial Policy 2009, <http://ic.gujarat.gov.in>.

- 2) 모디노믹스(Modinomics)는 모디(Modi)의 이름과 경제학(Economics)을 합성한 신조어로,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자율성을 추구하는 모디의 경제정책을 일컫음.

- 모디는 투자자별 맞춤형 산업단지를 개발하고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83개의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했을 뿐만 아니라 신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182개의 산업부지도 확보
- 또한 정책의 효율적인 이행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여 효과를 극대화하였음.
- 외국기업의 투자 시 가장 문제가 되는 토지수용 문제 해결을 위한 토지은행(Land Banks) 제도 도입, 투자계획 승인부터 생산까지 전 과정을 3년 내에 마치도록 보장하는 주정부지원협약(State Support Agreement) 등이 있음.

■ 모디 집권기의 구자라트는 연평균 9.8%의 실질성장률을 기록하였고(같은 기간 인도 전체는 7.4%), 특히 2013년 인도 전체의 경제성장률이 4%대로 급락할 때에도 구자라트는 8% 성장을 달성하였음.

- 구자라트는 고성장을 시현하면서도 재정건전성을 유지하였으며, 기업 환경도 크게 개선하였음.
- 모디 집권기 구자라트 제조업 성장률은 연평균 5.6%로 인도의 다른 고소득 주의 2.9%를 크게 앞섰고, 재정적자는 2002년 GDP 대비 5.2%에서 2012년 2.6%로 축소되었음.
- 인도 28개 주 중 구자라트는 외국인투자 유치 4위, 인프라 6위, 기업환경 5위에 올라있고(2012년), 2006년까지 피크타임 기준 22% 부족했던 전력을 2013년 전량 공급하는 데 성공하였음.

그림 5. 모디 집권(2011. 10) 이후 구자라트와 인도 전체 GDP 성장률 추이 비교



주: 구자라트는 2001년 1월 26일 발생한 대규모 지진으로 사상 최저의 경제성장률(-4.9%)을 기록.

자료: CEIC.

■ 모디노믹스는 인프라 확충과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여 민간의 투자를 최대한 유인함으로써 경제성장과 함께 일자리를 창출하고³⁾ 산업발전의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요점임. 이를 위해 정부는 관련 규제를 타파하여 정책의 실행력을 극대화하는 노력을 병행할 것임.

2) 총선 모디노믹스

■ 한편 모디가 이번 총선 공약에서 발표한 경제개발계획도 구자라트 개발계획과 매우 유사함.

3) 구자라트는 2001~11년간 인도 평균(0.4%)보다 높은 연평균 2.2%의 고용증가율을 기록했음(인도통계청, 10인 이상 작업장 기준).

- 가장 강조한 부분이 인프라 건설로, 모든 가정에 전력과 필수 인프라(주택, 가스 공급망 등)를 공급하고 100개의 신도시(Smart City)와 위성도시를 세우는 한편 산업화랑(Industrial Corridors)과 화물화랑(Freight Corridors) 사업을 가속화함.
- 모디는 모든 도시를 도로로 연결하고 산업단지와 항구를 잇는 고속열차를 도입하는 한편 세계적인 수준의 항구를 건설하여 인도를 제조업 생산 및 수출 허브로 만들겠다는 계획임.
- 또한 노동집약적 제조업 발전을 통한 대규모 일자리 창출, 산업경쟁력 강화와 브랜드 인디아 추진, 관료주의 철폐, 적극적인 통상정책 등 핵심적인 부분에서 유사점이 많음(공약 내용은 부록 참조).

■ 모디 신정부는 친기업, 친시장 경제개혁을 적극 추진할 것이며, 구자라트 경제발전 모델을 원형으로 이를 전국 차원으로 확대하는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됨.

- 무엇보다도 지난 10년간 환경보존 등의 이유로 유보되었던 인프라 프로젝트를 비롯한 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재개할 것임.
- 2000년 초 환경을 이유로 지연되는 사업비중은 1~2%에 불과하던 것이 2012년에는 10%로 치솟았음. 사법부의 잦은 개입과 인도의 새로운 토지수용정책(Land Acquisition Policy) 등으로 주요 사업 추진이 지연되어왔음.
- 반면 BJP는 이전 집권기(1999~2004년)에도 중앙정부 프로젝트의 기한 내 집행률을 1999년 21%에서 2003년 41%로 제고한 바 있으며, 특히 철도, 전력 및 정유 사업의 집행은 신속하게 완료되었음.
- 이미 까르나타카를 비롯한 다른 주에서도 구자라트처럼 투자자들의 토지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토지은행(Land Banks)을 설립하는 등 구자라트의 성공사례를 따르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음.

■ 모디노믹스가 주 단위가 아닌 전국 단위로 추진될 경우 구자라트에서와는 달리 속도 저하와 정책 변경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이번 총선에서 BJP는 주정부와의 조화로운 정책입안을 강조하며 'Team India'라는 개념을 도입하였으나, 중요한 경제정책에 있어 중앙정부와 주정부의 권한이 동등하여 이해가 대립되는 경우 주정부가 정책 집행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⁴⁾
- 1991년의 역사적 개혁개방을 진두지휘한 만모한 싱 총리도 최근 10년 집권기간 중에는 일부 연정 참여 정당의 반대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개혁 선구자의 이미지마저 희석되었음.

나. 거시경제정책 및 전망

■ 모디는 총선 공약에서 인도 경제가 직면한 시급한 거시경제 과제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물가안정, 고용창출,

4) Fred Neumann, co-head of Asian economics research at HSBC in Hong Kong. Bloomberg Television. 5/13. 인도는 중요한 경제 이슈(노동, 교육, 재산권, 임야, 식품, 전력, 가격 조정, 세제 등)를 'Concurrent List'로 분류하여 중앙정부와 주정부가 법 제정 및 집행에서 동등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음. 대표적인 예로 통합 상품서비스세(GST: Goods and Services Tax)는 일부 주의 반대로 2000년 BJP 정부가 처음 제안한 이후 아직까지 전면적으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음.

성장을 회복을 제시하였음.

- (물가안정) 인도 물가상승의 주요인으로 지목되었던 식품가격 안정을 위하여 물가안정화기금 설립, 인도식품조합(Food Corporation of India) 역할 재정립, 농산물 전산관리 시스템 도입 등을 제안
- (고용창출) 섬유, 신발, 전자부품 조립과 같은 노동집약적 제조업의 전략적 육성, 소매업 현대화와 시장 연계성 강화, 인프라 건설로 일자리 창출, 청년 창업 장려, 기술개발을 통한 취업능력 제고
- (성장률 회복) 단기간의 성장률 회복 처방을 제시하기보다는 경제개발계획의 이행을 통하여 산업발전과 고용창출을 이루어 결국 고성장을 회복하는 단계적인 플랜을 제시⁵⁾

■ 그러나 이와 같은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며, 인도 경제가 직면한 상황을 고려할 때 단기간에 경기가 회복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 2013년 9월 이후 외국자본이 순유입으로 전환되면서 금융시장은 안정되었으나,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도 제기되는 등 인도 거시경제의 리스크 요인이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음.
 - 2013년 9월 이후 주식과 채권시장에 각각 91억 달러와 41억 달러의 순유입이 시현되었으며, 금수입 규제 이후 수입증가율이 -14.2%(2014년 1~4월)로 무역수지 및 경상수지 적자도 대폭 감소
 - 그러나 경제성장률은 2013/14년 3/4분기(10~12월)에도 4.7% 증가에 그쳐 최근 7분기 연속 4%대의 저성장을 지속하며 재정적자는 GDP 대비 -4.9%에 달함. 반면 물가는 3월부터 식료품을 중심으로 상승 압력이 다시 높아져 4월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기대비 8.6%로 다시 소폭 증가
- 따라서 하반기부터 경제가 서서히 회복될 것이나 2014년도 경제성장률은 전년에 비해 소폭 성장하는 데 그칠 것으로 평가됨.⁶⁾
 - 2014년 하반기에는 엘니뇨로 인한 작황 부진이 예상됨에 따라 식료품을 중심으로 물가의 추가상승 우려도 제기

그림 6. 해외자본 유출입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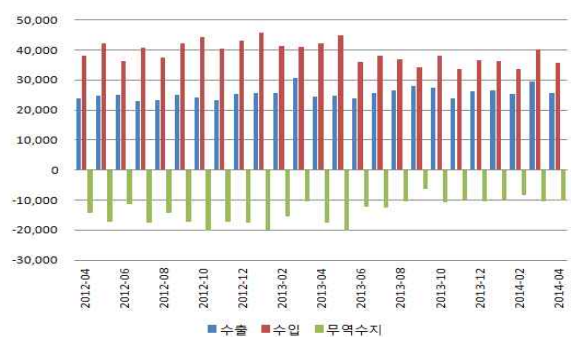
(단위: 백만 달러)



자료: CEIC

그림 7. 무역수지 추이

(단위: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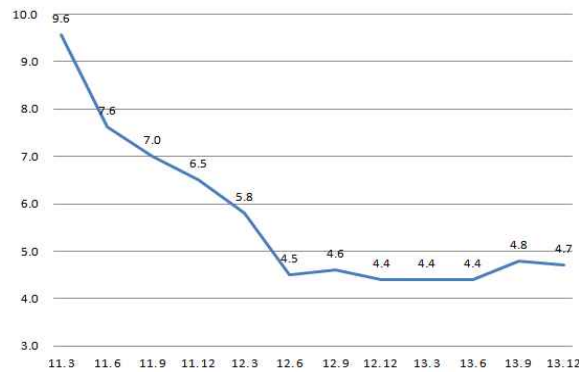
자료: CEIC.

5) BJP 홈페이지(<http://www.bjp.org>) Vision of Modi 중 Development Plan.

6) 인도의 2014년도 경제성장률을 IMF(World Economic Outlook)와 Yes Bank는 5.4%, HDFC Bank는 5.5%로 전망.

그림 8. 경제성장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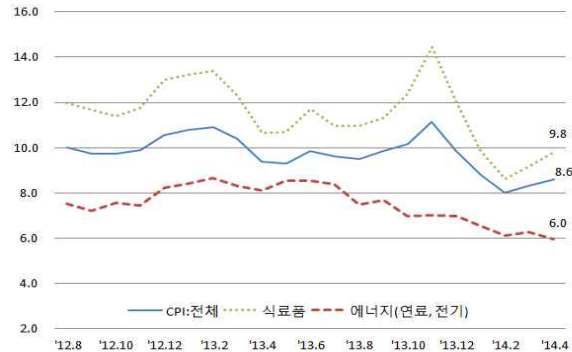
(단위: %)



주: 분기별 자료, 전년동기대비.
자료: CEIC.

그림 9.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

(단위: %)



주: 전년동기대비.
자료: CEIC.

■ 장기적으로는 모디 신정부의 강력한 리더십하에서 인도 경제가 재도약의 기반을 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특히 모디 신정부는 재정적자 절감 노력을 강화하는 등 거시경제 펀더멘털의 건전성을 중시할 것으로 기대
 - 이번 선거공약에서도 재정 원칙을 강조한 BJP는 1999년 집권 초기 GDP 대비 5.7%이던 재정적자를 2004년 3.9%로 줄였으며, 모디는 구자라트 재정적자를 2002년 GDP 대비 5.2%에서 2012년 2.6%로 절반 정도로 축소

3. 시사점

■ 이번 총선은 인도 사회에서 이제는 정치, 종교, 카스트보다 경제 문제가 중요해졌음을 보여줌.

- 하층민 출신의 모디가 이끄는 BJP가 야당으로서 과반수 이상 의석을 차지한 것은 경제성장이 최우선 순위에 있음을 보여준 것임. 특히 계층 의식이 희박하고 경제 논리에 민감한 청년층이 인도 정치와 경제의 주역으로 부상하면서 인도 사회는 큰 변화를 경험하고 있음.
 - 이번 총선에서도 유권자 8억 1,450만 명 중 투표에 처음으로 참여하는 1억 2,000만(15%) 청년층 및 도시 중산층이 66.4%의 역대 최대 투표율을 견인하며 BJP 승리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됨.

■ 이에 따라 인도 신정부와의 경제협력 기회 확대와 함께 국가간 대인도 경제협력에 대한 경쟁 또한 보다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선제적 대응이 요구됨.

- 이미 일본은 인도의 4위 해외투자국으로서 최대 규모의 인프라 사업인 델리-मुंबई 산업화랑 건설사업을 주도하고 있으며, 인도의 1위 교역대상국인 중국도 인도에 대규모 인프라 건설 투자를 계획하고 있음.

- 모디 총리는 구자라트 주총리 시절에 우리나라를 방문하여 한국의 경제발전 모델과 도시계획, 인프라 건설 등에 각별한 관심을 보였음.
 - 구자라트의 주총리였던 모디는 2007년 새만금을 방문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 구자라트의 칼파사르만 간척사업을 의뢰하였으며, 2008년에는 토지주택공사와 우리나라 최초의 한국전용 산업단지 개발을 추진하였으나 현재는 중단된 상태임.
 - 또한 BJP는 총선 공약집(서론)에서 인도의 협력관계 파트너로 한국을 가장 먼저 언급할 정도로 우리나라를 중시하고 있음.⁷⁾

■ 우리 기업들은 다양한 투자기회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경영의 투명성, 책임성에 더욱 유의해야 할 것임.

- 모디 신정부는 규제 완화와 함께 투명한 조세제도 확립,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강조하는 한편 친환경 경영을 위한 지침도 강화할 예정임.
- 따라서 이러한 신정부 정책의 기조를 파악하여 여타 국가들과 차별화된 진출전략을 수립하고 한·인도 경제협력 관계를 증진시킬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KIEP

7) “It(India) had an international outreach from Korea to Arabia, from Bamiyan to Borobudur and beyond,” Election Manifesto 2014, Bharatiya Janata Party, p. 1.

부록. BJP 공약(Manifesto)의 주요 내용과 실현가능성 점검

분야		주요 내용	위험요인	실현 가능성
당면 과제	물가 안정	물가안정화기금 설립, 농산물 전산관리, 식품조합 개혁	주정부 협조 필수, 기술 부족	중
	고용 창출	노동집약적 제조업 육성, 소매업 현대화, 인프라 건설, 창업 장려, 취업 상담 및 훈련 실시	구체적 실천계획은 없으나, 제조업 생산 증대로 일자리 창출	중상
	부패 척결	국민인식 제고, 정부 투명성 강화(전자정부), 조세제도 합리화, 해외유출 블랙머니 국고 환수	행정적 실행의 어려움	중상
	국가신뢰도 개선	정부 기능 부활, 전 사회의 행정 연계성 강화	주정부 및 전 부처 협조 필요	중
국가 경영	Team India	중앙-주정부 간 Team India 구성을 통해 주정부의 정책결정 및 집행 참여 독려	주정부간 이해관계 상이	중하
	국가·국민 통합	낙후지역 발전 및 연계성 확대, 국회 여성 의석 33% 할당, 여성 기술 및 직업교육 실시	우선순위가 낮음	중하
	참여 촉진	PPPP(People-Public-Private Partnership) 독려, 지방 자치기구 뻘차야뜨(Panchayat) 활성화	행정적 실행의 어려움	중하
경제 개발 계획	인프라 개발	전 가정에 전력 및 기본 인프라 공급, 신도시(Smart City) 100개 개발 및 위성도시 건설, 고속열차, 항구 개발 및 하천 연결	주정부 협조 필요, 민간자금 동원이 관건	중상
	제조업 육성	산업 현대화 및 경쟁력 향상, 세계적 수준의 제조업 허브 육성, 은행 개혁(NPAs 축소), 인구 및 자원 집중지역 개발	사업토지 승인은 주정부, 사법 절차는 입법부 등의 협조 필요	상
	토지 수용	국가토지활용정책 도입으로 과학적 토지 수용 추진	토지수용법(Land Acquisition Act)의 한계	하
	조세	세계 간소화 및 합리화(복잡한 소득세, 소비세 등 철폐와 상품서비스세(GST)도입), R&D 투자 세금혜택 부여	상품서비스세(GST) 도입은 지난 수년간 조율해온 사항	상
	FDI	FDI 적극 유치, 일부 국방산업 개방(소상공인 보호 위해 멀티브랜드 소매유통 추가개방은 반대)	소상공인과 다국적 유통기업 간의 이해 상충	상
	노동	노동법 개정, 비공식부문의 노동자 조직화(신원카드 발급), 노동자 대상 금융 서비스 지원, 연금·의료보험 확대	경제·사회적 비용 과대	하
	교육	고등 및 직업 교육 강화, 노동자 대상 사이버 직업교육 공간 마련 등 실용적인 교육 강조, IIT, IIM, AIIM과 같은 전문 고등교육기관을 인도 전역에 설립	예산 배정 우선순위 낮음	중하
	농촌	농촌의 전산화로 수출입 지원, 도시와 같은 시설·기회 부여로 Rurban 개념 도입	자금 및 조직화가 관건	중
	에너지	종합적인 국가에너지정책 마련, 대체 에너지 적극 개발	구체적 실천계획 부재	중
	환경	탄소배출권(Carbon Credit) 도입, 환경친화적인 생산, 환경친화적 건물과 에너지효율 작업장을 위한 지침 마련, 환경기술 분야의 R&D 및 인력 개발 장려	정책 의지는 있으나, 우선순위가 낮음	중
	외교·통상	개방적 통상정책 강화(동아시아, 미국) 및 국제사회 발언권 확대 추구	테러리즘의 위협 상존	중상
	안보	안보 위험요인 및 테러리즘 강력 대응, 국가안보기구 강화, 국방대학 4개 신규 설립, 국방 관련 R&D 확대	힌두-무슬림 간 갈등, 테러 발생 가능성 증가	중상

자료: BJP 홈페이지(<http://www.bjp.org>), Standard Chartered April 8, 2014. India - Hope builds, but delivery will be key 및 현지 언론보도 등을 활용하여 저자 작성.